

용산공원 주택 해법 못 찾은 서울시·국토부… 다음주 재논의

주택 공급 문제 논의했지만 입장차
김윤덕 장관 “청년 등 공급 필요”
오세훈 시장 “주변 국유지 협의 가능”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부지를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데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공원 주변 국유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에는 협의할 수 있다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이날 김 장관과 면담한 뒤 “결론적으로 용산공원에 대해서는 평행선이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전체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방안은 어떤 경우에도 서울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한 톤으로 분명히 말씀드렸다”며 “여기에 동의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서울 중구에서 만나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방안 등 현안을 논의했다. /서울시

것은 시장으로서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용산공원은 서울 시민의 삶의 질

과 여기에 직결되고 남산부터 한강까지 이어지는 녹지축의 주요 부분”이라며 “전체 부지 가운데 일정 부분이라도 주거 용도로 전용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재

차 강조했다.

다만 용산공원 주변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에는 협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인근 산재 부지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게 논의해보자는 일종의 절충안을 말씀드렸다”며 캠프킴 부지와 이태원 경리단길 인근 국군재정관리단 부지, 외교부 주차장 부지 등을 언급했다. 후암동 한국은행 생활관 부지 등도 활용 가능한 부지로 거론했다.

오 시장은 “며칠 전 권영세 국회의원이 말씀하셨던 근처에 활용할 수 있는 부지들에 대해서는 여러 교통 대책이나 상하수도를 비롯한 도시 기반시설 설치 문제를 전향적으로 적극 검토하고 보완할 용의가 있다고 역제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정부·여당이 용산공원 특별법을 개정해 공원 내 주택 공급을 추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민 여론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국회에서 법을 바꾸는 부분

은 국민의힘이 소수 정당이라 사실상 막을 힘이 없다”면서도 “용산공원을 100년, 200년 후 미래세대에 물려줄 삶의 공간으로 유지·관리해야 한다는 데 많은 서울시민이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도 회동 후 양측의 견해차를 인정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와 국토부의 입장을 확인했고 다음 주에 또 만나 대화를 계속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핵심 쟁점은 용산공원 일부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에 공급하기 위해 속의 및 논의 과정과 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분명한 견해차가 있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대학, AX 필요성 공감에도 재정난 ‘발목’

대교협, 192개 대학 총장 대상 설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확대 요구

대학 10곳 중 9곳은 인공지능 전환(AI)을 추진하기 위해 상당 수준 이상의 정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AX 투자 비용을 전액 자체 조달할 수 있다고 답한 대학은 한 곳도 없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2026 KCUE 대학 총장 설문(II): AX 시대의 고등교육’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6월 2일부터 7월 10일까지 192개 회원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144개교가 응답했다. 응답률은 75.0%다.

◆AX 전환 필요성 커졌지만…절반 이상 “재원 부족 등으로 계획 못 세워”

조사 결과 향후 3년 내 AX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는 대학은 41.0%(59개교)에 그쳤다. 반면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재원 부족이나 내부 검토 등의 이유로 아직 계획 수립·추진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는 대학은 55.5%(80개교)였다.

특히 AX 전환 계획이 없다고 답한 2개교를 제외한 142개교 가운데 투자 비용을 전액 자체 조달할 수 있다는 대학은 한 곳도 없었다. 89.4%(127개교)는 정부 지원이 상당 부분 이상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부 지원 없이는 AX 전환 추진이 곤란하다는 응답은 국공립대가 65.6%, 소규모 대학이 63.6%로 높았다.

대학 총장들은 AI 인프라·플랫폼 구축과 AI 기반 교육과정·콘텐츠 개발, 교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지난 3월 개최한 2026년 정기총회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대교협

자의 AI 역량 강화 등 AX 환경 구축 6개 분야 모두에서 93.7% 이상이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성이 가장 높은 분야는 ‘AI 인프라·플랫폼 구축’(5점 만점에 4.29점)이었다.

◆대학 총장 최대 관심사는 ‘재정’…AX 재원도 정부 지원 확대 요구

총장들의 전반적인 관심사에서도 재정 문제가 두드러졌다. ‘정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사업’이 79.9%(115개교)로 가장 높았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교육’이 60.4%(87개교)로 뒤를 이었다. 발전기금 유치에 대한 관심도는 전년보다 5.6%포인트 상승해 10위에서 8위로 올라섰다.

AX 전환에 필요한 재원 확충 방안으로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정부 전입금 확대’가 289점으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구조 개편’을 통한 고등교육 재원 재배분’(177점), ‘고등교육세 등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법정 재원 구조 마련’(171점)이 뒤를 이었다.

대학 간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총장의 88.2%(127개교)는

AX 시대 고등교육 혁신을 위해 대학 간 공동 개발·공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효과적인 공동 개발 분야로는 ‘교육 특화 AI 시스템’이 230점으로 가장 높았고 AI 기반 학습관리·학습데이터 플랫폼 및 표준 체계(176점), 공동 컴퓨팅 인프라(120점) 순이었다.

◆대학 88.2% “AI 공동 개발·공유 필요”…현장 변화보다 대응은 뒤처져

대학 현장에서 느끼는 AI 변화 속도에 비해 실제 대응은 뒤처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모든 조사 항목에서 ‘변화 체감’ 수준이 ‘대응 수준’을 못쫓았다. 특히 AI 인프라 구축·운영 재정과 AI·첨단 분야 교원 확보 및 산업현장 전문인력 활용에서 격차가 컸다.

인재 양성 방향으로는 ‘AI를 전공에 접목하는 융합 인재’(233점)가 가장 높은 선택을 받았다. 반면 기초·순수학문 학과의 경우 36.8%(53개교)가 학생 수요 감소로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해 AI 융합교육 확대와 기초학문 유지 사이의 균형도 과제로 나타났다.

/이현진 기자

인하대, 동문 기업인 이름 딴 강의실 조성

발전기금 기부자 현판식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가 반도체 인재 양성에 기부한 동문 기업인 3명의 이름을 신축 반도체·바이오 교육동 강의실에 붙였다.

인하대는 20일 반도체·바이오 교육동 2

층 강의실 3곳에서 기부자 명의 현판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강의실에는 한복우(썬제너셈 회장, 김중현(썬유니테스트 회장, 황정현(썬아이닉스 대표)의 이름이 각각 붙었다. 세 사람은 모두 인하대 동문으로 반도체특성화대학지원사업 발전기금을 기부했다.

/이현진 기자

서울교육청, 자치구와 유보통합 협력 확대

강북·관악 유치원·어린이집 안전 지원

서울시교육청이 유보통합에 대비해 자치구와 함께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안전 지원과 영유아 인프라 데이터 구축, 합동 모니터링 등 협력을 확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월부터 강북구·관악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시설안전관리관을 운영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경미한 시설 보수를 지원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5월에는 28개 기관에 98건, 6월에는 46개 기관에 149건을 지원했다. 이용기관 만족도는 5월 97.3%, 6월 100%로 평균 98.7%를 기록했다.

강동·동작·영등포구와는 ‘영유아 교육·보육 인프라 데이터 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영유아 인구와 유치원·어린이집 이용 현황, 생활권 정보 등을 GIS 기반 정책지도에 구현해 지역별 시설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는 사업이다.

강동구는 공동주택 입주와 재개발에 따른 인구 변화, 동작구는 영유아 인구 감소에 따른 관련 시설 접근성, 영등포구는 맞벌이·외국인 아동 비율을 고려한 연장·시간제 보육과 다문화가정 서비스 수요 등을 분석한다.

교육지원청과 자치구가 어린이집을 함께 방문하는 합동 모니터링도 이달부터 11월까지 진행한다. 교육지원청의 사업 모니터링과 자치구의 지도·점검을 한 번에 실시해 어린이집의 중복 방문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같은 협업 사례는 지난 7월 교육부와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이 주관한 연수에서 교육청·지자체 협업 우수사례로 선정돼 전국 시도교육청과 지자체에 소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올 하반기에도 자치구와 지역 여건에 맞는 협력사업을 추가 발굴해 2027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경상원, 국제표준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31개 부패방지 과제 추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이 국제표준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인 ‘ISO37001’ 인증을 획득했다.

경상원은 최근 중소벤처기업인증원으로부터 ISO37001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ISO37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인증으로, 조직 내 부패 발생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차단·방지하기 위한 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인증 범위에는 소상공인·전통시장·골목상권 지원 및 교육, 경기지역화폐 홍보 등 경상원의 주요 사업 전반이 포함됐다.

경상원은 인증 획득을 위해 지난 4월 부패방지경영방침을 수립하고 전 부서를 대상으로 부패 리스크를 식별·평가했다. 또 내부 청렴담당관을 활용한 내부심사원 양성 교육과 자체 내부심사를 진행하고 1·2차 외부 심사를 거쳐 부패방지 정책과



경상원은 최근 중소벤처기업인증원으로부터 ISO37001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상원

절차, 통제 시스템을 국제 기준에 맞게 체계화했다.

그 결과 기관 특성을 반영한 31개 부패방지 세부 추진과제 수립과 임직원 대상 반부패·청렴 교육 강화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김민철 경상원 원장은 “앞으로도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소상공인과 도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